

서울시 산하 중부기술원에 무슨일이

입학하니 교수 없고, 직원·원장 다툼... 교육생들 '혼란'

교수 '계약만료' 강사가 수업 중 학생들 "복직 혹은 새교수 뽑아야" 서울시 "더 유능한 강사가 교육중"

서울시 산하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이 계약직 교수의 계약만료 공지 없이 학생들을 모집해 논란이다. 여기에 원장 비위의 의혹을 둘러싼 내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7일 교육원 A학과 학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교육원 누리집에서 담당 교수 소개와 교육과정을 참고해 교육원에 지원했다.

이달 초 입학한 학생들은 계약직이던 해당 교수의 계약이 2월 만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학생 B씨는 "교수 소개와 교과 과정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입학신청했다"며 "하지만 교육원에 와보니 교수는 계약이 만료돼 강사 세 사람이 수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원 원장실 문에 '출장' 표시가 돼 있다.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법종 기자

◆학생 "새 교수 뽑으라"VS 서울시 "강사로 충분"

학생들은 담당 교수의 복직 또는 조속한 신입 교수 임용을 요구하고 있다. 담당 교수의 강의 여부를 교육원 측이 사전에 공지 하지 않아 학생을 기만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

난달 초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교수가 같은달 중순 학생 면접에서 자신이 계속 강의를 맡을 것처럼 이야기한 교수 측의 잘못이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원이 일부러 공지 안 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교육원은 더 유능한 시간강사를 확보해 기존 교육과정을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기훈 기술

원장은 "지난 4년간 교육원에 학생이 교수 보고 찾아온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시는 학생 모집기간 진행되는 공지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민간 경영상의 일인데 (학생대상 공지 관여는) 과도하지 않느냐"며 "시 예산을 주고 적법하게 쓰는지 확인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원 땅과 건물, 기자재는 서울시 소유지만 운영은 위탁기관이 한다. 운영권은 기존 송실공생복지재단에서 2015년 명지전문대 산학협력단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가 교육원에 배정한 예산은 지난해 41억원, 올해 48억원이다.

교직원 재계약 검토 근거인 취업률 적용 방식도 논란이다. 시와 이 원장에 따르면, 각 학과 교수의 취업률 최종 합산 기간은 학기 종료 이후 3개월 뒤인 5월까지다.

이를 두고 지난해 2월 입사해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교직원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엉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다른 학과 교수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중도탈락률 모두 실적이 하위였다"며 "기술원은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 역시 "다른 학과의 중도탈락률은 10%대인 반면, 해당 교수 수업의 중도탈락률이 33%로 높은데다 취업률 또한 9%대로 낮았다"고 강조했다.

인사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담당 교수는 "밑실에서 열리는 인사위

원회가 재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근거를 알려주지 않고, 재심 기간 사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재계약 불가사유를 해당 직원에게 공지한다"고 반박했다.

◆직원-원장 내분으로 시골

교육원은 원장 비위 의혹을 둘러싼 내분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원장은 성추행을 포함한 20여개 민원으로 지난 달 11일 직무정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 현직 직원들은 "직원을 원장실에 불러놓고 1시간씩 다른 직원을 헐담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했다",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고과를 매겨 직원들 성과급을 안 줬다", "면접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재계약 하지 않았다", "평소 관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 "지난해 9월 자녀 학자금 지원제를 도입해 본인과 측근 중심으로 혜택을 줬다" 등을 주장했다.

반면 이 원장은 '실무형 원장'이 들어선 이후 출결 기록 조작 등 비위를 일삼던 교직원들이 징계 검토를 막기 위해 음해성 투서를 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2015년 위탁기관이 명지전문대로 바뀌면서 교학처장으로 입사했는데,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과 노조가 공고한 기록권을 지키려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년간 반복된 허위 민원에 지쳐 간경화와 당뇨가 와 몸무게 12kg이 빠진 상황"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 직원을 불러다 지적인 것을 헐담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인사재량권이 원장에게 있지만, 각종 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처리돼 인사 비위를 저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용차 사용의 경우, 늦은 밤까지 외근을 한 뒤 교육원에 다시 차를 돌려놓기 힘들어 발생한 일로 관련 규정도 없다고 해명했다. 직장인이 원하는 복직인 학자금 지원을 제안해 노사위원회가 통과시켰고, 혜택은 지난 학기 정규직·계약직 구분없이 받았다는 반박도 이어갔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소형건설장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이자부담 경감 주담대 2종 공급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판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에 잠 설치 서민차주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에 상관 없이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하는 '월 상환액 고정형'과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2종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부터 15개 은행에서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는 대출을 말한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을 10년간 고정할 수 있다. 통상 변동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난다. 올라간 이자만큼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원금 3억원에 3.6%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30년 만기)을 이용하면 매월 135만9000원을 상환해야 하고, 1년 뒤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151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를 이용하면 10년간 금리변동과 상관없이 월 135만9000원만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리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은 금리로 제공된다.

금리변동폭도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이자상환액만으로 월 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금리가 0.1%포인트 낮아진다. 신규대출이나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다. 대출금 증액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선 제외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